한국사회과학협의회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2013-1호 (통권11호)

발행인: 정용덕, 편집위원장: 김근세

목 차

1쪽. 권두언

2쪽. 상반기 주요활동

3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일본 나카무라 아라키 교수

5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브루나이 샤미미 교수

7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일본 아라키 요시노부 교수

9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일본 마부치 마사로 교수

11쪽. 국제학술대회: 글로벌/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필요성과 가능성

13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미국 노트 잭 교수

15쪽. 회원학회 하반기 행사 일정

16쪽. [논단]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 과제와 정부역할

(사단법인)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소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Tel 02-735-2159 Fax 02-737-3264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304-28 Sajikdong, Jongnogu,Seoul 110-054, Korea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권두언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운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잘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자가 가진 것을 뺏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파이를 더 크게 하되 나눔은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은 넓은 개념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넘어서 빈부 간,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도·농 간, 남녀 간, 세대간,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에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장 절실하다. 대기업이 주로 부자 것이고, 도시 특히 서울에 많으므로 대·중소기업간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도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됨을 말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면, 반대로 거래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면 경제가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기업이 근로조건을 내놓았을 때 노동자가 마음에 안들면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새로 찾을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또 한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기업이 구두주문, 납품가 후려치기, 어음결제 등 불공정거래를 추구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력이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점인 이유다.

이렇게 보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측면에서의)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쉬운 것부터 따져보자.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또는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보상적인 것이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가 후려치기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중소기업 위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융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동반성장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이 촉진되고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 한국경제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50-20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일본·중국에 비해 국가신인도가 같거나 높아졌다. 그러나 투자가 부진하여 잠재성장력이 떨어졌다. 대기업은 돈은 많으나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다. 따라서 투자증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에는 첨단, 핵심기술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중기적으로는 R&D의 방향전환, 즉 D에서 R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혁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면 단기적 성장을 이루고 지속적 성장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또한 동반성장은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더 낫게 하여 사후적 복지수요를 줄인다. 일종의 사전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상반기 주요활동

1월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일본의 사회과학
일시: 1월 19일
발표: 나카무라 아리키 메이지대 명예교수

운영협의위원회
일시: 1월 22일
장소: 코리아나 호텔

학술심포지엄
주제: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 과제와 정부의 연구지원 방향
일시: 1월 22일
장소: 코리아나 호텔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브루나이의 사회과학
일시: 1월 29일
발표: 샤미미 부르나이 국립대 교수

3월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일본의 사회과학
일시: 3/24
발표: 아라키 요시노부 일본정치사회학회 회장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일본의 사회과학
일시: 3월 27일
참여: 마부치 마사로 일본정치학회 회장

이사회
일시: 3월 27일
장소: 달개비

5월

국제학술심포지엄
주제: 글로벌·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필요성과 가능성
일시: 5월 16일
장소: 코리아나 호텔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미국의 사회과학
일시: 5월 24일
참여: 노트 잭 USC 정책대학원 원장

6월

KSSJ 40-1호 발간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일본의 사회과학

- 일시: 1월 19일
- 장소: 달개비
- 나카무라 아키라 교수
- 통역: 홍진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나카무라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에서 정치학 학사와 남가주대(USC)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그 후 35년째 일본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재임하며 대학원장, 대학 연구담당 부총장 등을 지냈다. 정부에서는 총무성의 심의회 의장을 연임한 바 있다.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는 일본 사회과학의 특징과 연구비 지원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다. 홍진희 교수는 일본 메이지 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후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의 사회과학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일본의 사회과학 학자들은 반드시 정부와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몇몇 교수들이 일본 정부의 일에 관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계에서 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정부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 및 요직을 차지하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여성 교수가 장관 등의 각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일뿐 실제로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학계와 정부 간의 관계 변화는 대학 인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 관료의 정년퇴직은 54세이기 때문에, 보통 퇴직 관료들은 사기업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회전문 인사'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2009년 민주당을 중심으로 퇴직관료의 사기업 재취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퇴직관료들이 대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본의 주요 사립대학에서는 문부성의 퇴직관료들이 특임교수라는 명분으로 들어와 학장, 부학장 등의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문부성에 퇴직관료를 통하는 것이 펀딩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퇴직관료를 통한 정부 내부의 정보를 통하여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비

일본은 문부성 산하의 일본 학술진흥재단 (Japan Association for Promotional Sciences: JASPA)이라는 기관이 일본의 모든 대학의 사회과학 펀딩을 관장하고 있다.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본에는 크게 3개의 연구기금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과학 연구비로 일본의 전 대학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이다. 이번에 일본인이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과학 연구비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족해주었기 때문에 연구를 발전시켜나갔던 것이다.

두 번째 기금은 COE (Center of Excellence)이다. COE는 일본의 대학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기 위하여 요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몇몇 개의 우수한 대학뿐이다. 예를 들어 도쿄대와 교토대, 동경공업대 등의 국립대학들과 와세다대, 게이오대, 아이치 대학, 관서 대학 등의 우수한 사립대학들이다. 일본에 700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대학이 COE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문부성이 지원하는 기금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어떠한 학문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경향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을 읽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문부성의 퇴직관료를 영입하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이지 대학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학 부분의 COE를 받게 되었다. 이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하여 관료들을 영입하고 공격적인 선전을 하는 등 5년 여간 대학차원에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COE는 유명한 대학과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울대, 연고대 등이 연구자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연구자금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방의 국립대학을 도와주기 위하여 Good Practice (GP)라는 연구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펀딩은 어느 대학이든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국립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금이다. 지금 일본에는 700여 개의 대학이 있고, 그중에서 국립대는 90여 개가 있으며 나머지 600여 개의 대학은 사립대이다. 하지만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앞으로 4년 후부터는 대학을 진학하는 젊은이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600개에 달하는 대학의 절반인 약 350교가 파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하여 국립대를 양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추세로는 지방의 국립대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재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약 52%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 진학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이는 일본 대학 중 다수가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은 생존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유수한 대학의 경우 대학의 질을 제고하고자 정원을 삭감하고 있다. 게이오 대학은 원래 정원이 적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와세다 대학의 경우 학생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메이지 대학의 경우도 법학부, 정치경제학부, 상경학부의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사회과학의 기본이 되는 법학, 경제학, 정치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의학부와 공학부를 증원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결과이다. 일본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를 줄이고 이공계를 늘이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브루나이 사회과학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 일시: 1월 29일
- 장소: 조선호텔
- 브루나이국립대
- Syamimi Ariff 교수 및 황보열 교수

샤미미 교수는 영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부르나이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보열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경영대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부르나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브루나이 사회과학 발전의 필요성

브루나이에서는 국가 발전, 특히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브루나이 경제는 에너지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자원은 곧 고갈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자정부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자정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알맞은 시설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직은 브루나이의 기반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정부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시민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자정부 체제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1년 브루나이 전자정부센터가 설립되었다. 앞으로 전자정부센터가 정부 정책을 발굴하고 전자정부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사회과학 연구의 어려움

브루나이의 경우 두 개의 기관에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를 실시한다. 하나는 FBE (Faculty of Business and Economic Studies)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 정책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2년 전 설립된 전략과 정책연구센터 (Center for Strategic and Policy Studies)이다. 하지만 이 둘은 자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연구를 진행한다. 사회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는 매우 힘들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문적 연구라기보다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브루나이 대학도 사회과학 내에서의 학문적 융합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에서 맡겨진 연구에만 매진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학 이외에도 외국 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는데 이 경우 브루나이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정부가 컨설팅에 의존하여 연구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브루나이의 대학에서 연구를 하려면 SNT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SNT 위원회에서 검토 후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 심사 과정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승인 위원회를 꾸리는 것 조차가 힘들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연구를 하여도 발표할 수 있는 학술지가 하나밖에 없다. 전략과 정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는 것으로, 이마저도 3~4년 전에 처음 생긴 것이다. 게다가 대학교수들은 지나친 행정업무로 인하여 연구나 논문에 할애할 시간이 모자란다.

영국의 영향

과거 브루나이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브루나이의 학자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 또한 브루나이 대학에서도 영국 이론을 배우고 가르친다. 하지만 브루나이의 현실은 영국과 다르고, 현재의 영국식 시스템은 브루나이에 적합하지 않다. 1984년 이전, 브루나이가 주권이 없고, 브루나이 국민들이 영국 여권을 소지하던 시절에는 엄격한 영국의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구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도 브루나이는 영국식의 강한 관료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부에서의 결정이 아래로 잘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이고,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영국식 관료제는 브루나이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로 인해 행정업무가 느려지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경험은 여전히 브루나이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사회화에 큰 영향을 주듯이 브루나이에서는 기본 통치 개념인 MIB(Melayu Islam Beraja: 말레이 언어와 문화, 이슬람 교리와 가치, 군주 체제의 시스템)가 브루나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MIB는 종교나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이다. 브루나이 사회가 고학력, 고소득 사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부르나이인들은 MIB를 따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갈등이 적은 편이다.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일본의 사회과학과 정부의 역할

- 일시: 3월 24일
- 장소: 조선호텔
- 아라키 요시노부 정치사회학회 회장
- 통역: 나카무라 토라아키 우송대 교수

아라키 교수는 게이오대에서 정치심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최근 20년간 선거정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일본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는 일본에서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석사 및 서울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후 현재 우송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첫째는 융합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일본 사회과학은 전쟁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아라키 교수는 최근에도 사회주의의 영향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데 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강연자였던 요시다 타미요 교수는 동경대 출신으로, 일본학술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타미요 교수는 1999년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요시가와 히로요키 교수가 '사회를 위한 사회 속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에 큰 영향을 받아 프로그램의 과학화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은 사회적인 약속을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오른쪽 주행이지만 일본은 왼쪽으로 주행한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다만 자연과학 연구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약속'이라는 용어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 평등 등이 사회적 마스터플랜이며 모든 사회과학은 이러한 약속 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학문 간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학술적 융합에 대한 주장이 무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 주장하려 한다.

둘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원래 지구온난화는 자연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사회과학이 개입하여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연과학자들이 먼저 사회과학자들에게 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술적인 융합을 시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실적인 과제의 경우 융합연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물리학, 과학과 사회과학처럼 추상적인 학문이 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역사의 경우 그동안 환경역사를 등한시 해온 자연과학계가 최근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분야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연과학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역사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과학계에서는 역사를 옛 물건을 수집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역사학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셋째, 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겠다.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과학적인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UN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일본 문부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초과학적인 접근이란 실험실 안에서의 지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학적인 지식뿐 아닌 다른 지식 역시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과 비과학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의 일본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일본 산업의 95%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 또한 매년 3만여 명이 비관 자살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경제학자들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일본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고전적 경제학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일본의 모든 대학에서 고전파 경제학을 가르치지만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통하여 고전파 경제학의 중요성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금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은행 자체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행의 개혁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별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다. 영국에서도 일본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본의 신고전 경제학자들은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일본의 사회과학과 제도

- 일시: 3월 27
- 장소: 달개비
- 마부치 마사로 일본정치학회 회장
- 남경태 교토대 법학부 교수

마부치 교수는 일본 교토대 법학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다. 현재 일본정치학회 회장으로 있다. 남경태 교수는 교토대 법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들은 일본 사회과학 발전의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토론했다.

1. 제도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권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일은 힘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처음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질 때 정치인들이 많은 참여를 했으나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 몰락을 했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치가 관료 주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은 캐치프레이즈를 정치주도로 하였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관료주도에 대해서 의의가 없었다. 무라마츠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부터 정치주도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와 관료주도를 적절히 혼합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 학자들이 민주당 정권에 제언을 할 때 일본은 관료주도이므로 이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을 계속하였다. 자민당은 관료를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나, 민주당 정권하에서 관료는 단순 업무만을 하게 되었다. 전문 관료 수십 명이 연구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50년 전통이었는데, 그 전통이 장관에 의해 임의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연구자로서 분석하는 학파와 실용학문(개혁파)의 두 가지 학파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는 분석하는 학파가 세력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분석을 하는 학파 또한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중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학파가 가장 강하고, 게임이론 등 연역적인 방법론의 연구 그룹이 있다. 합리적 선택론이 강했으나, 그에 대항하는 다른 세력들도 힘을 얻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사람이 제도를 간단히 바꿀 수 없다는 것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논점이다. 합리적 선택론에 경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합리적 선택론과 역사적 제도론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도 개혁이 왜 어려운가?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제도와 실제: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가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와 실제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와 실제의 괴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도에는 없지만 실재하는 경우와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도와 실제의 괴리: 제도이지만 실태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자. 이의 전형적인 예는 직계제이다. 직계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難易度), 책임도(責任度)에 따라 계급과 직급별(職級別)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며 같은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분업제도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직계제는 오랫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다가, 2007년 폐지되면서 공식적인 제도로써의 모습을 감추었다. 다른 한편, 심하게 비난받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제도는 「제도」에는 없지만 「실제」로서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전에 존재했든 국가 1급 시험이나 현재의 종합직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된 사람들은 다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승진이 빠르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없다.

제도 보완성: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 보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제도가 있다. 제도 A를 바꾸려고 해도,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도 B가 있어, 제도 A의 지지자도 가세하고, 제도 B의 지지자로부터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제도 A를 바꾸는 것이 한층 어려워진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비공식적인 제도를 예로 든다. 제도 A는 내각 제출 법안을 어느 정치가가 체크하는가 하는 제도이다. 족의원과 장관이다. 제도 B는 장관 임명의 기준에 관한 제도이다. 당선 횟수와 전문능력이다.

자민당 시대는 I의 상태였다. 당선을 거듭한 의원은 장관이 되는 대신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책은 족의원. 당내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책 체크를 실시한다. 제도 개혁에 의해서 II로 이행했다고 하자. 대신은 전문 능력을 기준에 임명되게 되지만, 여당 심사는 계속되는 상태이다. 이 경우, 장관과 여당 쪽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면, 양자가 충돌해 당내 질서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노려 관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도 할 것이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정치적 체크 기능은 I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III으로 이행했다고 하자. 당선 횟수로만 장관이 된 정치가가 법안을 체크하는 것은 어렵고, 만일 체크하려고 하면 잘못된 지시를 내려 행정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일본의 내각제도가 추구하는 IV로 이행하려면, 장관 임명의 기준과 법안 체크의 주체를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둘 다 큰 문제라서 동시에 개혁을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어느 쪽인가 먼저 시작한 개혁이 실패해서 현재보다 나쁜 상태(II 혹은 III)가 되는 것이다.

이 예는 두 가지 개혁을 세트로 실시하는 경우이지만, 무수한 제도가 결합되어있는 일본에서, 복수의 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위의 간단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결정권을 서로 다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개혁의 타이밍이 일치하리라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제도 A		
		족의원	대신
제도 B	당선횟수	I	III
	전문능력	II	IV

제도 보완성은 이와 같이 제도 개혁의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 적이 있다. 경제학자 타케나카 헤이조우는「그러나 제도의 보완성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서로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한꺼번에 모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메이지 유신과 전후 개혁을 예로 들고 있다(http://www.ne.jp/asahi/shin/ya/intr/takenaka/02.htm). 하지만 대규모 개혁은 무수한 사람들의 대량 유혈사태를 수반했다. 불합리한 살육도 있었다. 어느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무런 희생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의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평화롭게 바꾸려면 천천히 착실하게 바꾸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실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 한다.

2. 정부와 학문(학회)의 관계

연구비에 대한 제약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구비를 신청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자금의 사용 기준이 엄격해졌다. 현재 두 가지의 연구비 a와 b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a를 위해 사용 하십니까? b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를 물어본다. a를 위해 구매한 것을 b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심지어 볼펜의 사용에 대한 통제도 있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컴퓨터를 두 대 사는 것이 낭비이지만 그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에 사용할 때 재량이 필요한데, 제약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비는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자연과학 계통의 연구비를 관장하고 있다. 외무성에서도 연구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있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의 연구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비를 통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국제학술심포지엄

2013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글로벌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2013년 5월 16일 코리아나호텔에서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주제는 〈글로벌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로, 융합연구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 지구 및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간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적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 행사에서는 해크만 하이데 세계사회과학협의회 사무총장과 오하이오 주립대의 랄쉘더스 조스 교수가 세계 사회과학과 융합연구가 마주한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어서 박찬욱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각국의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진행상황 및 도전 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서 오후 세션은 2010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한국(SSK) 사업 지원에 의해 융합 연구를 진행해 해온 한국 학자들이 융합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응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중앙일보
일시: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장소: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세미나실)

AM 9:30–10:30 개회식 및 기조연설
개 회 사: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환 영 사: 나승일 교육부 차관
축 사: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기조발표: 해크만 하이데(국제사회과학협의회), 세계 사회과학 발전의 비전과 과제
랄쉘더스 조스(오하이오대), 분과학문들의 융합: 필요성과 가능성

AM 10:30–12:30 해외 학자 논문 발표: 융합연구의 현황과 전망
사회: 박찬욱(서울대)
발표: 아라키 요시노부(무사시노대), 프로그램 과학과 문리융합의 진화론적 접근
쩡 샤오잉(북경대), 중국에서의 융합연구: 현황과 도전
토론: 김성주(밀레니엄프로젝트 일본지부), 김유신(부산대), 이수봉(북경사범대), 최재천(이화여대)

PM 02:00-03:40 한국 학자 논문 발표 I : 융합연구의 범위와 방법

사회: 임희섭(고려대)

발제: 조성겸(충남대), 융합 연구에의 영향요인
김문조(고려대), 한국에서의 융합연구 현황: 인문사회분야를 중심으로
이중식(서울대), 인문학 기반 융합의 과거와 미래

토론: 김학수(서강대), 배영대(중앙일보), 이남인(서울대)

PM 03:40-03:50 휴식

PM 03:50-06:00 한국 학자 논문 발표 II: 융합연구의 응용

사회: 원우현(고려대)

발제: 조증열(경남대), 한국어 문식성 발달 및 장애에 대한 융합연구
정미라 외(가천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뇌기반적 융합연구
김유신(부산대)/김유경(한국외대), SSK 국가브랜드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분과과학의 융합 과정
권만우(경성대), 영화와 게임물 등급 분류의 융합과학적 접근

토론: 기영화(숭실대), 민동필(서울대), 심성욱(한양대), 홍성욱(서울대)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미국의 사회과학

- 일시: 5월 24일
- 장소: 그랜드 하이야트 호텔
- 발표: 미국 남가주대 정책대학원
  노트 잭 원장

Jack Knott 교수는 캘리포니아대(UC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리노이대 교수를 거쳐 남가주대 정책대학원(USC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사회과학의 문제

미국 사회과학이 직면한 네 가지 문제들과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겠다.

첫째, 미국의 사회과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학계에서는 주택 문제와 금융 경제의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연방준비위원회(FED) 위원장마저도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또한 급작스러운 중동의 정치적 변화나 중국, 한국의 경제적 변화 역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능력이 점점 감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과학을 공부한다고 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이슈는 다면적인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역시 다면적 성격을 띠는 이슈였다. 이러한 이슈는 학제간의 융합연구를 필요로 한다. 금융위기의 경우 금융학자들은 금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금융이란 가족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학제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꾸준하지만 정작 융합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셋째, 정치와 사회과학 사이의 관계이다. 최근 의회는 정치학 리서치 펀딩을 대폭 삭감하였다. 보건경제 분야 역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상태이다. 의회는 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의 펀딩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학문을 좌우하는 하는 것이다.

넷째,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모두 국제적 협력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이는 좀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다. 미국의 정치학은 미국의 의회, 대통령, 선거와 정당, 정치행태를 연구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미국적인 것이라 국제적 협력이 어렵다.

미국 사회과학의 발전 방향

위에서 지적한 미국 사회과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는 학제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Price 정책대학원의 예를 들면 몇몇 연구소에서 네트워크 이론, 게임이론, 제도 분석, 법, 경제, 조세정책, 인지과학 등과의 접목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활발하게 융합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둘째,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거버넌스가 정책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늘어나야 한다. 셋째, 각국의 사회과학이 고립되어 연구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연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 민간 부분의 협력이 필요하다. USC Price 정책대학원의 예를 들면, Price 재단으로부터의 1,500만 달러 기금 수여, 대학원 내 3개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아놀드 슈와저네거 재단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기금 수여를 통한 슈와저네거 국제정책연구소 설립, 레놀드 쉐이퍼 보건정책연구센터, 사회혁신센터 등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또한 4천만 달러의 외부 연구금을 지원받아서 학생 수를 1600명으로 늘일 수 있었다.

회원학회 하반기 행사일정

경제사학회

[경제사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시: 8월 31일 토요일
장소: 한국방송대 본관 회의실 101호

[연말학술대회]
일시: 12월 14일 토요일
주제미정, 장소미정

국제개발협력학회

[월례토론회 오다가다 사랑방 개최]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6월, 7월, 10월, 11월)
장소: 경희대 총동문회관

[개발협력 카페 개최]
일시: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6월, 10월, 11월)
장소: 경희대 총동문회관

[학술대회 개최]
9월: 추계학술대회
12월: 정기학술대회

[학회지 국제개발협력연구 발간]
연간 2회 (6월, 12월)

한국경영학회

[2013 제15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일시: 2013. 8. 19(월) ~ 21(수)
장소: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주최 : 한국경영학회
주관 : 매일경제신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주 제 : 돌봄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 각 국 사회서비스의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13. 11.1(금)~2(토)
장 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2013년도 연차학술대회 '건강과 행복']
일 시: 2013년 8월 22일(목)~24일(토)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

한국언론학회

[한일국제심포지엄]
주제: 일본의 대중문화개방 이후 양국의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1998년、김대중 · 오부치 케죠(小渕恵三) 양국 수뇌의 공동선언 이후
일시: 8월 31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한국언론학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심포지엄]
주제: 도시는 미디어이다
일시: 9월 26일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10월 중순 예정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윤리적 거버넌스
Ethical Governance:A New Paradigm for Public Administration
일시: 2013년 10월 18일(금)-19일(토)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동계학술대회]
박근혜정부의 1년의 평가와 과제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14일(토)
장소: 영남대학교

[논단]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과제와 새 정부의 역할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최 정책세미나 (2013년 1월 22일) 발표문 요약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 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제언

박혜자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사회과학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경험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과학은 단순히 결과를 분석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학문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더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단편적인 사고나 대안 제시보다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 지속가능발전, 다문화, 안전, 세대 갈등, 계층 갈등, 거버넌스, 다문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를 다각도로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 지원, 과학기술분야 지원의 1/10 수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 대한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1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세계 2위로 2001년 16조에서 2011년 49조 8,904억 원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중 3.8%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이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교과부 학술지원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2,173억 원으로, 이 중 집단연구군은 1,3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8%, 개인연구군은 626억 원으로 28.8%, 성과확산군은 137억 원으로 6.3%, 국제교류군은 11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예산 2조 1,916억 원의 약 1/10 수준에 불과하며, 과학기술분야 중 대규모의 사업을 제외하고 기초연구 사업만 비교할 경우에도 약 1/5 수준입니다. 또한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 대부분은 기초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성과 확산 및 사회적 담론 형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회과학 연구지원의 비중은 인문사회 연구지원 예산의 10~15%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더 흥미로운 지표는 연구개발 사업 예산지원의 증가율입니다. 인문사회분야의 예산은 전년보다 22억 증액되었지만 이러한 증가율은 1.0%로, 과학기술분야 6.4%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만약 증가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된다면 10년 후에는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 간 학술연구 지원의 격차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회과학 학술연구 지원 효과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

왜 이처럼 사회과학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은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까요? 그 전제에는 과학기술은 성장지향적이며 발전 동력인 반면에, 사회과학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과학기술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은 주관성, 폐쇄성, 추상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연구결과가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산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논문 편수, 특허, 기술 등 성과 중심으로 연구 효과를 산출한다면 사회과학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와 함께, 무엇보다 콘텐츠보다는 인프라 중심의 정부 예산 결정과정은 사회과학 학술지원 예산을 상대적으로 소외시켜 왔습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경제적 효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 예술인문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인문학 및 예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효과는 투입금액 단기 10배, 장기 15~20배의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0억 원이 투자된다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2조 원의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창출됩니다. 아마 사회과학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효과입니다. 단선적 성장 중심에서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회과학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회 발전을 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활성화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과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생성하여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한국사회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관심이 학문적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시적인 응답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집단연구와 성과확산 연구 등의 사업에서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전 국가적인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 지역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은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어젠다 발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의 경우 역시 과제 배분을 지역에 균등하게 함으로써 보다 연구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문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취하는 융복합 연구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 비율 5% 수준까지 확대, 총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지원 비중 4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현상 이해의 기초가 되고 정부정책의 초석이 되는 사회과학을 위한 투자가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학문에 우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로의 집중 투자는 다른 분야의 학문적 공동체의 축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제 사회과학이 사회인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변모되도록 사회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소통을 창출하고, 창출된 소통을 통해 공감을 유도하며, 사회적 담론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과학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회과학 학술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세미나가 보다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과제와 정부의 연구지원 방향

김교헌 한국심리학회 회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은 초기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모방하고 개량하는 단계에서 사회와 인간을 중심에 두고 기술과 인문 및 사회과학을 융합하는 창의적 실용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과학기술의 단계로 진전해야 한다. 사회적 과학기술은 과학자와 기술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정부, 기업, 나아가서 수요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는 융합 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한다.

먼저,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등의 칸막이가 제거되는 과학과 연구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말로만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을 융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은 들러리 세우는 흉내만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BK 사업 등에 사회과학이 주가 되는 연구팀이 지원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제대로 된 융합이 되는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연구비를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9:1의 비율로 나누어 제공하는 현실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연구재단으로 통합되었던 연구지원 기능을 이공계(구, 과학재단)와 인문사회계(구, 학술진흥재단)로 다시 나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문이 돌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연구과제의 평가 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SCI, SSCI 위주의 단기적 논문 실적만으로 모든 연구를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편향적이고 한국사회를 무시하는 평가체계는 크게 바뀌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실제 문제 해결의 정도를 핵심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문제해결의 타당한 지수들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타당성 지표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미래창조 과학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과 정신과정에 대한 정밀과학이자 실천 기술이다. 융합, 인간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화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심리학계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분과학회가 14개로 늘어났고, 학회 회원도 1만 7,000명을 넘어 한국의 최대 규모 학회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학술논문의 발표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한국심리학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및 세계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하려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자살' '대학 입학 사정관제'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쇼핑 및 성 중독'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 등의 사회문제에 정밀한 설명과 실천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발족시키고 실천적인 활동을 개시하며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려 한다.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심리학 개념이나 용어들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과 협력하여 웹 소통을 기획하고 있다. 세계 심리학계에서 아시아 심리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인 혹은 한국인의 심리가 세계인의 심리 속에 제대로 된 자리에 서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 한다. 일본과 중국 심리학계와의 협력과 소통, 아시아 및 세계 심리학 대회의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심리학회는 열린 자세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통계적 인프라의 구축

김낙년 경제사학회 회장 (동국대 교수)

통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SSK의 지원 사업 분야를 보면, 사회과학의 각 분야별로 현재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가 원래 이러한 실용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지 않지만, SSK의 과제가 대부분 그러한 연구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각 지원과제가 수행되고 그들이 축적된 결과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또는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SSK 사업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을 진흥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각

분야별로 통계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연구하기 위한 통계는 현재 국제 기준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관련 통계간의 부정합이 나타나거나 일관된 통계계열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연구해 온 분야의 통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폭을 넓히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지원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가 장기통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재무부 산하의 통계국, 그 후에는 상무국 산하의 센서스국(U.S. Bureau of the Census)이 장기통계의 정비를 주도하였다. 그 성과가 1949년에 처음 『미국의 역사통계』로 간행되었고, 1965년과 1975년에 두 차례 통계 계열을 update한 개정 증보판이 나왔다. 그리고 2006년에 발간된 『미국의 역사통계: 새천년판』(*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Millennial Edition*)은 5권(4,000페이지)으로 발행되었으며 수록된 통계 항목 12,500개에나 달한다. 이를 주도한 것은 학자들이며, 이를 통해 장기 역사통계의 정비가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선진국 중에서는 역사통계의 정비가 늦은 편이며, 정부의 지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즉 일본은 히토츠바시 대학(국립) 경제연구소 산하에 일본통계문헌정보센터를 설립(1964년)하고, 전용 건물과 도서관, 직원 및 교수가 근무하고 있고, 연구 추진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널리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매년 예산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보장되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통계정비 작업을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고, 그 작업은 학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성과가 1960-80년대에 걸쳐 발행된 『장기경제통계』(*Long Term Economic Statistics* 총 14권)이다. 이 통계 시리즈는 1970-80년대 세계적인 일본연구 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에도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지역의 장기 역사통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통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가는 그 사회의 심층적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인프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과학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통계 인프라의 정비는 개인 연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점차 관련 학자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장기경제통계(LTES) 시리즈는 당시 일본연구 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수요도 그에 못지않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지 지배와 빈곤을 경험하였지만, 그로부터 고도성장을 이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1950-80년대에 걸쳐 높은 경제적 성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주는 시사는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개도국에 시사를 줄 수 있는 경험적 자산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장기통계 인프라가 정비되면,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 연구 지원의 필요성

둘째, 이와 관련하여 SSK의 지원 분야에는 현재와 미래만 있고, 역사 연구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 연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각 분야가 어떻게 변화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발전이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연구의 심화와 축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몇 차례 체제 전환의 경험해 왔고, 단기간에 걸쳐 급속한 변화 발전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이 한국의 이러한 경험을 제대로 구명하게 되면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하는 잠재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대사(예컨대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평가)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학술적인 대화나 진지한 성찰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 편향된 역사교육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실(facts)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학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도록 방치해 온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로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사에 관한 연구는 이만큼 뒤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연구가 제대로 축적되면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SSK에서는 한국 현대사 연구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연구재단의 인문학 쪽의 지원 사업을 보면, 주로 근대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 연구가 지원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의 SSK나 다른 인문학 지원의 지원 사업 모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 판단으로는 한국 현대사 연구는 SSK의 주된 지원 분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재단으로부터 SSK가 역사 분야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 지원되는 과제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과제 심사에 대하여

셋째, 신청된 과제의 심사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연구재단으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신청과제가 과연 연구계획서 대로 수행 가능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신청 과제의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 하나는 신청자가 과거 공동연구 형식의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연구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얼마나 연구의 기획과 수행 능력은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데에는 이 보다 더 좋은 판단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경우든 심사자가 그와 같은 공동연구를 실제로 수행해 보고 일정한 성과를 낸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결국 자격 있는 심사자의 선발이 관건이 된다.

융합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 발달은 새로운 학문적 도전이자 기회

김동규 한국언론학회 회장 (건국대 교수)

최근 들어 언론학회 차원에서도 융합과 통섭의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소통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다 학제적(multi- disciplinary) 접근을 시도하여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소셜미디어 열풍을 놓고 언론학자 뿐만 아니라 정차학자, 심리학자, 법학자를 초빙,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치적 소통과 SNS〉라는 저술로 발간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적 도구를 확보하는 일이 언론학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보고 온라인 서베이, 웹 트래픽 분석, 사회연결망분석 데이터마이닝분석, HCI 실험연구방법, 메타분석, 시나리오분석, 디지털 민속지학 그리고 코퍼스를 활용한 내용분석 등 18개의 방법론을 융합과 통섭시대 언론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선정하고 강의와 저술을 통해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미 저널리즘이나 언론사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 분야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고, 하부 학문영역의 세분화와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각 전공영역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인접학문분야와의 융합과 통섭 또한 아직까지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거나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 언론학의 과제는 각 전공영역의 뿌리내리기와 함께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을 본격화하고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학회차원의 학문적 과제를 전제로 정부와 연구재단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회활동의 성과물은 학술지를 통해 나타난다. 연구재단의 등재지는 각 대학의 연구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재단에서 현재의 등재지 체제를 변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술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대학 및 학과평가를 포함해서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재단은 현재의 등재지 선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개편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사회과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하여 유관 학회들을 대상으로 한 긴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에서 선정 및 평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과도한 정량적 평가체제로 인해 학문의 질적 발전 보다는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다. 연구재단의 SSK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체계가 질적이고 평판 중심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학문 활동은 여전히 양적 실적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영역의 고유한 학문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학회의 과제 중 하나가 미디어 교육(MIE)의 활성화이다. 이는 이전 정부들의 중요 국정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학회들 간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정부기관 즉, 교육정책 당국과 미디어정책 당국 간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넷째, 읽기문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소통의 위기는 대부분 거친 논리와 표현을 담은 말에 기인한다. 그로인해 상호이해는 적어지고 불신은 커진다. 그래서 선진국은 문자와 읽기를 중요시한다. 사고와 표현은 글 읽기와 글쓰기에서 나온다. 이처럼 글이 중요한 이유는 글이 자기주장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여론파악과 형성의 통로이며 갈등 조정과 중재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미디어를 통한 읽기 교육은 사회 소통의 활성화는 물론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문의 한국화 시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적 이론이나 모델개발을 통한 학문의 토착화 시도에 대한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과학은 서구이론을 수입해서 이를 한국현실에 적용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한국적 이론을 개발하고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교육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발전과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원대 교수)

한국교육학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o 모학회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는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각 학회가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모학회인 교육학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학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

o 분과학회에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모학회인 교육학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공중심의 분과학회 가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회원확보와 이에 따른 회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o 분과학회의 잦은 학술대회 개최로 인해 회원들의 교육학회 학술대회 참여율이 저조함

o 교육학회 학술지인 '교육학연구'에 대한 투고 보다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보다 투고를 함으로써 '교육학연구'에 투고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한국교육학회 발전 방향

o 한국교육학회는 교육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 학회가 존립하고 있어서 이제는 학문분야 연합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학회의 성격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o 금번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교육학회 학술지인 '교육학연구'가 비교적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경우 한국교육학회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분과학회의 경우는 차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한국교육학회와 분과학회들은 상호간 평등관계를 유지하지만, 교육학회의 분과학회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경주할 필요가 있음

o 타학회들과 마찬가지로 학회운영을 위한 재정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학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학회에 대해서 연구재단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o 한국연구재단의 ssk 사업을 통한 지원은 한국교육학회의 경우에는 분과학회(또는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독자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별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과학의 발전과제와 새 정부의 학술연구 지원정책: 여성학 입장에서의 토론문

김은실 한국여성학회 회장 (이화여대 교수)

다학제 접근을 하는 여성학 입장에서의 연구정책에 대한 제안

한국여성학회는 1984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여성 사회과학자들이 주도가 되어 창립이 되었지만 여성학회는 처음부터 학제 간 연구자들의 학회로 위치를 정했다. 그래서 여성학은 일찍부터 여러 분과학문들이 경계를 넘어 서로 교섭하면서 영향을 주는 다학제적 접근을 해왔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여러 분야와 학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학회 회원은 약 850여명이다.

연구재단의 학문 분류표에 따르면 여성학은 현재 복합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회과학 내에서는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의 분류 내에 여성인류학 혹은 젠더 등으로 소분류화 되어 있다. 여성학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학제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여성학회가 여성학을 복합학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사회과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그리고 인문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는 여성학으로 수렴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다학제적 접근을 하는 여성학이 기존의 학문 분류 틀 내에서는 수용되기가 어렵고, 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탈락률 또한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재단에 여성학 연구계획서가 심사되거나, 여성학 연구가 평가될 때 발생한다. 복합학 사업단에서 평가될 때 여성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합학 사업평가자들에 의해 심사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분과학문 틀 내에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여성학은 기존에 학문적 주제가 되지 못했던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거나 혹은 기존 학문에 도전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틀을 지닌 분과학문의 학자들 혹은 여성학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복합학 소속 학자들에 의해 심사될 경우 학문적 수월성과 권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학문적 분위기는 학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분과 학문적 틀을 고수하고 그 분과에 속할 경우 더 심사결과가 좋거나 더 좋은 연구로 간주된다. 이러한 불리함에 대한 비판과 의견이 여성학회 내 학자들에 의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연구를 둘러싼 학문 범주 간의 갈등, 학제 간 연구와 분과학문 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성격을 띤 여성학 같은 학문을 주변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융복합이나 학제 간 연구가 새로운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융복합적 혹은 학제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나 학자들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한국의 학술연구 정책의 주류에 빨리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제적이고 융복합적인 새로운 학문들을 범주화하고 평가하는 본격적인 논의들이 학술연구 정책 내에서 제고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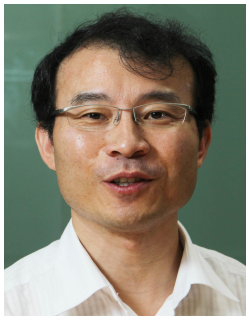
새롭게 부상하는 연구주제, 연구자들, 연구소, 학술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틀에 대한 요구

21세가 되면서 분과학문의 틀을 고수했던 근대적 학문 분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융복합 혹은 다학제적인 접근들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다시 기존의 분과학문의 틀과 범주에 안주하고 기대게 만드는 연구 분위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학제인 연구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과의 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재단에서 제안되고 있는 SSK의 공모 연구주제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변화를 도모하거나 새롭게 사회를 조직화하는데 필요한 연구주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복합적인 방식의 주제를 제안하고 있지 못하다. 시장이나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주제들이 연구정책 차원에서 계발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인구와 사회 재생산, 돌봄,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주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출산, 사회적 재생산, 돌봄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까지 사회를 재생산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는 시각과 주제의 전환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학문 연구에 있어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외국의 지성들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연구 정책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연구주제가 제안되었으면 한다. 젠더 감수성이 연구의제 제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국제화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 정책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연구자 그리고 연구소, 학술지 등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국제화의 지수를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서 연구나 경험이 한국 사회 내에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화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이미 국제화의 경험이 축적된 연구소나 학술지의 경험은 어떻게 한국 사회의 학문의 국제화를 정책화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량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과 과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또 이러한 정량적 경쟁이 학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연구를 중시하면서 한국을 지식 생산의 중심으로 만드는 공동적 작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많은 국제학술 대회 그리고 많은 국제학술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의 역사적 경험을 서로 참조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축적되어야 하고 또 진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지식생산의 지역적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화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질 높은 국제학술지 발간, 국제학술지에 대한 논문기고, 국제학술대회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비서구의 아시아 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세계화하고 다른 국가의 학자들과 공유하는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서구 학자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어떻게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 여전히 서구적인 평가에 기준 한 SCI, S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문제, 학술지의 Impact factor 등을 대체할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다. 한국만이 아니라 비영어권 학자들의 지식공동체 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국의 연구자들, 연구정책가들, 행정가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인문사회과학의 위기와 학술연구단체의 위상

배영대 차장 (중앙일보 문화부)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우수학술지 지원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일이 있다. 정권 말기에 학계 전반을 뒤흔들만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무척 이례적으로 보였지만, 뭔가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모습이 놀라웠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 점을 다시 깊이 짚어보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학술지 지원정책의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학자들의 대응이 어떨까 하는 것이 궁금했다.

'인문총'이란 낯선 이름의 단체가 생겨나 눈길을 끌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문총'이란 한국인문학총연합회의 약칭이다. 인문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정부의 학술지 지원정책 변화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모인 것인데, 그때 인문총의 등장을 보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의문은 왜 사회과학 관련 학술단체들은 공동의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난 27년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개별 학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거나 도와주고, 또 일찍부터 해외에 우리 학술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인문학 관련 학술단체들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하는 듯 보였던 배경엔 아마도 그런 역사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세계에 소개하는 영문 학술지(KSSJ)를 간행할 뿐 아니라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 세계사회과학협의회(ISSC) 등에 한국 사회과학의 대표기구로 참여하며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과학분야 밖에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2010년부터 새롭게 추진해온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Social Science Korea)도 주목된다. 한국 사회과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지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사회과학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불거진 '우수학술지 지원정책' 논란은 발등의 현안이어서 그렇지 그것만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함께 겪는 문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닥친 일종의 위기라면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우리 시민들과의 교감 혹은 신뢰 관계를 정립하는 일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독서시장이 얼어붙었다. 2011년『정의란 무엇인가』, 2012년『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을 비롯한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책이 보이지 않는다. 시대를 진단하고 독자들의 심성을 울리는 깊이와 넓이를 갖춘 인문사회과학 책이 잘 보이질 않는 것이다. 교수 평가 점수를 채우기 위한 논문 쓰기에 바빠서 그런 것인가. 꼭 그것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기엔 시대 흐름의 변화도 한몫 하는 것 같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호한 진단과 분석이 가능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게 가능하질 않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포스트모던 상대화 담론은 그런 경향을 부추긴다. 그럼에도 정보의 유통과 습득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고 많아 졌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 유통의 공간과 시간을 뒤흔들고 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 누가 나서서 시대를 진단하고 사회를 점검하며 심금을 울리는 총론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분야 지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1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세계 2위다. 2001년 16조에서 2011년 49조 8904억 원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중 3.8% 정도에 불과할 정도다. 박혜자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예산지원의 증가율을 보면 그 격차는 더 크다면서, 인문사회과학분 예산은 전년보다 22억 증액되었지만 이러한 증가율은 1.0%로, 과학기술분야 증가율 6.4%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격차가 나도 너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전망을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박혜자 의원의 진단을 보면, 과학기술은 성장 지향적이며 발전 동력인 반면에 사회과학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의 의식 구조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다.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단순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고 그 효과도 즉각적일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은 즉각적이기 힘들다. 때문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나오는 논문의 성과를 효율성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는 일 외엔 확실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안은 없을 것 같다. 솔선수범을 통해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나아가 정책 당국자들의 선입견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우리 사회엔 풀어야 할 갈등과 난제가 수도 없이 많다. 모두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자들의 진단과 분석을 기다리는 숙제들이다.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나라로 치면 대한민국보다 더 한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짧은 기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민주화까지 보란 듯이 이뤄냈다. 식민지를 거쳐 나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또 얼마나 지난했는가. 참혹한 전쟁까지 겪으면서 일궈온 우리의 삶에서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논문의 소재가 꿈틀거리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 얽히고 얽힌 문제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과의 관계 문제 등 외교적 현안도 산적해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소망하다 간신히 마련한 아파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은 누가 쓸어 줄 것인가.

이번 세미나는 사회과학 관련 15개 학회 대표들이 모이는 흔치 않은 자리다. 의견을 모을 것은 모으고, 비전을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우수학술지 지원정책'은 여러 학술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진행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제대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지난 27년 동안 쌓아온 저력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성숙한 연합 기구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해 본다. 학과나 전공 문제 같은 연구자 본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나는 정부 지원을 더 확보하는 문제도 시급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전문가들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사회과학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리학의 발전과제

손 일 대한지리학회 회장 (부산대 교수)

16세기 이래 근대 지리학은 세계화라는 실질적 공간 확장을 경험하면서 물리적 거리 변수를 극복하거나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자원과 인력의 지구적 편재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중심지 이론, 입지론 등 공간적 분업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식민 제국주의의 첨병 학문으로 복무해왔다.

하지만 지리학은 이론이나 담론 중심의 학문이라기보다는 백과사전식 박물학적 전통이 깊어, 근대 과학이 추구하는 연역적, 법칙 추구적 전통에서 약간 빗겨나가 있다. 또한 복합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특징은 그 구성원에도 반영되는데, 지리학계는 사회과학자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자 심지어 자연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대학 학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리학자의 경우 학과 내 동료 지리학자보다는 같은 부류의 타 대학, 타 학과 연구자들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회과학으로서 지리학은 공간 변화라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는데, 이 때 공간 현상의 기본 변수는 물리적, 시간적, 비용적 거리가 된다. 하지만 최근 교통, 통신 분야에서 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극단적인 경우 시공간은 점으로 축

소되어 기존의 거리-의존 지리학은 그 유용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공간에 대한 타 사회과학의 해석과 사회현상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에서 그 차이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지리학자에게는 지리교육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1. 범지구적 환경문제와 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및 조절

현재 지리학과 관련된 SSK 사업으로 "기후변화와 위기대응"이라는 과제 단 하나가 선정된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듯이, 기후변화, 해수면 변동,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각종 오염 문제 등 "지구환경변화와 사회의 취약성 혹은 적응"과 같은 주제는 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 간 연구의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다.

2. 국가관 재고 및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대중적 지리교육

현재의 다문화론이 민주주의, 다원주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다문화교육, 시민권, 인권, 국제화 등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탈북자나 다문화 이주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국토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중적 지리교육의 의미와 가능성 역시 나름의 실질적 과제가 될 수 있다.

3. 변경문제에 대한 국수주의적 인식과 역사지리학적 해법

우리에게 간도 내지 만주를 두고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인 연구와 담론 그리고 운동이 있듯이, 중국 역시 동북공정이라는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인 역사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지도, 만주어의 언어학적 해석, 고문헌 등을 기반으로 최근 지리학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역사지리학적 해석은 이념적 해석보다는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이에 바탕으로 한 학제간 연구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 과제에는 문헌 발굴 및 현장 답사가 필수적이라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4. 지리 정보의 활용을 위한 응용 콘텐츠의 개발과 전략

최근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 새 주소 사업, 지명법 제정 등으로 새로이 구축된 지리정보는 이전의 그것과는 양과 질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합하고, 각 주제별로 추출할 수 있는 응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제는 지리학이 국가적 공간 정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분야라 판단된다.

5. 문화경관의 다층적 함의와 학제간 경관학의 재구성

앞의 4과제는 물론 경관에 관한 다섯 번째 과제 역시 일반 사회과학적 과제와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장소, 공간, 지역 등 지리학의 교유 주제와 가까운 것으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경관의 상징성, 경관의 정치경제학, 경관의 이용, 가상 경관 등을 주요 주제로 하는 문화경관에 대한 도상학적 접근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landscape'(독일어의 Landschaft)를 번역한 것으로 처음에는 학술적 목적으로만 쓰였지만 지금은 행정 분야를 넘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구미 국가에서 경관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 지리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지만 그 후에는 조경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의해 더욱 확대, 발전되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럽 경관 협약'(2000)이 체결된 이후 경관의 개념이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성하는 요소, 즉 자연적 요소를 비롯해 경제, 사회적 요소 모두를 포괄할 정도로 종래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확대, 발전되었다.

경관연구의 세부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경관 변화와 문화변동과의 관계
2. 경관의 지역 차와 지역성의 규명
3. 문화의 수렴과 경관의 수렴과의 상관성
4. 모방의 확산과 경관의 변화
5. 역사 발전과 경관의 누층성
6. 경관 변화의 동시대성과 화석 경관

이는 경관 연구가 단지 문화경관 요소를 기록하고 분류하는 서지학적 단계를 넘어, 문화경관 요소들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특징을 밝히는 또 다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관의 자연적 기능이나 환경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경관의 문화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이나 지역의 발전, 또는 이에 대한 계획에서 경관의 다기능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관의 다기능성이라는 표현에는 경관의 생산에 작용하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과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으며, 생산된 경관 속에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심미적 기능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관의 다기능성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의미하며, 따라서 합리적 경관 관리를 위해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관 연구는 자연과 인간 사회에 공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경관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도

구와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연구재단의 지원과 관련해서 언급하자면, 사회과학으로서 지리학은 타 사회과학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을 정부나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자 풀의 한계로 과제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심사 단위 배분이나 과제 심사자 배정 등에서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과제와는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리학은 학문 초창기부터 세계 각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학문 본연의 과제로 삼아 왔다. 따라서 지리학과의 유무를 떠나 각 대학마다 특정 국가의 정보 센터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200여 개 대학이 있고, 전 세계 국가 역시 200여 개 있으니, 1대학 1국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과학, 언어 등의 자료가 국가별로 특정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발전과제와 새 정부의 학술연구 지원정책

신상협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경희대 교수)

한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인문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물론 학문 분야 간에는 서로의 관계와 역할이 존재한다.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인 인문과학은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고, 과학기술분야는 말 그대로 한 국가의 과학 수준을 결정하고 과학발전을 추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사회 과학은 경험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는 학문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또한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발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발전과제

학문은 전문화-세분화함으로써 발달하였으나, 그 결과 각 학문의 영역이 지나치게 좁아져서 특정한 학문만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현실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존 사회과학에서 현실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한 예가 학제 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학제 간 접근이 새로운 분과학문을 생성-발전시킨 경우이다. 둘째, 기존의 분과학문이 어떤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발전하는 경우이다.

오늘 날 사회는 분야와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복잡한 사회이고 또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날 복잡한 현실 문제들은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고,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협력이 더욱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학술연구 지원정책

현재 한국정부의 학술연구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은 학술연구재단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에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학술연구재단의 목적은 학문분야에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설립 이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좀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친 지원정책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등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현재의 학술지원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학술지원정책의 불균형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R&D) 투자가 한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 금액 중에서 단 3.8%라는 사실이다.(중앙일보 3월 1일)

2) 복합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오늘날 사회는 분야와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복잡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내/외 환경의 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문 분야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학술연구 지원정책의 큰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학술연구재단에서 지원 학문 분야에 복합학 분야를 새롭게 만드는 등 이런 문제를 보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정책은 이런 변화의 요구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한 예가 지원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학술연구재단의 학문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술연구 분야 분류에 한국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협력학이란 항목은 학술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복합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학회들에 대한 특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신생 학회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신생 학회 중에서도 복합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그 학문의 중요성이 직/간접적으로 인정된 분야를 연구하는 신생 학회인 경우에는 그 학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다양한 신생학회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제정치학이 당면한 과제

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인천대 교수)

대과제

1.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AIS) 출범

-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정학에서 볼 때 우리는 나라 밖을 적극적 개척하고 활용해야 함
- 우선적으로 한 · 중 · 일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제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나 후속세대들의 활동영역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나 매우 중요

-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는 아시아국제학회(AAIS)의 조직을 구상하고 있음
-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학술적 교류를 일차적 목표로 하고
-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 안보에 공헌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추진

2. 코리안 스쿨(the Korean School)의 모색

- 한국에서의 국제정치학은 그 동안 미국과 유럽의 국제정치학적 학풍이 주도
- 미국의 국제정치학은 초강대국의 국제정치학으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국제정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 따라서 한국 국제정치학, 동아시아 국제정치학, 미국 국제정치학의 학술적 비교분석과 보다 보편적인 대안의 탐색이 필요
-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의 탐색이 필요하고 Korean School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회의 영문저널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가 연구재단 우수학술지 지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Korean School을 모색하고 주도하는 학술지로 발전시킬 계획

3. 21세기 코리아 모델의 모색

-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결합되고,
-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되어,
- 세계에 한국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한편,
- 개도국들의 국가발전모델로서의 21세기 코리아 모델을 모색하는
- 학술적, 정책적 연구과제

4. 21세기 국제정치 변화와 국제정치이론

- 21세기 국제정치 현실은 17세기 유럽 중심의 근대 국제 체계에 많은 변화들이 진행
- 따라서 근대 국제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국가, 영토, 주권, 외교, 국방 등 전통적 국제정치 요소들의 변환에 대한 연구와
-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의 변화를 모색하는 연구

중소 과제

1. 해외개발원조(ODA)와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과 전략

- 그 규모와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해외개발원조와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과 전략 연구
- 성공적인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 연구

2. 한반도 정전체제 60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 한반도 정전체제 60년을 평화와 번영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정치 연구
- 한반도 미래, 통일, 동북아 국제정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 연구의 필요성
-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 주요 내용, 국제법적 효력 등을 분석, 남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의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 북방한계선(NLL)과 서해평화 문제, 서해 무력충돌의 원인과 재발방지 방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절차와 방식 등을 연구

3. 한미 동맹 60년과 한미동맹의 미래

- 2013년은 한미 동맹 60년
- 한미 동맹의 형성과 전개과정의 역사적 고찰
- 21세기 국제관계의 변환과 한미 동맹의 진화
-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미 동맹의 변화
- 중국의 부상과 한미 동맹의 미래
- 한반도 통일과 한미 동맹의 미래
- 한미 동맹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문제: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 등

4.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국제정치

-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위협요인 가능성
- 카이로선언, 포츠담회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르는 전후 국제협력 연구
- 국제규범의 왜곡과 냉전의 국제정치 연구
- 궁극적으로 역사와 국제정치로부터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연구

SSK 관련

1. 지원 단위에 학회를 포함시키는 방안

-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의 학술성을 제고하고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회 단위로도 지원 가능하게 하는 방안 검토

2. 다중지원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 일부 대학에 복수의 SSK 사업이 편중되게 지원되는 문제
- 연구의 우수성과 지원의 공평성이 조화되는 방안의 검토

3. 일정 규모의 예산확보와 지속적 사업으로 정착

- 매년 예산규모가 축소 조정되는 문제
- 이에 따른 지속사업 여부 불확실 등의 문제

4. 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 연구진작

- 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한국사회학의 발전과제와 연구재단의 지원

정진성 한국사회학회 회장 (서울대 교수)

한국사회학의 현황

사회학은 정치학, 경제학 등 다른 사회과학보다 늦게 근대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설립되었다. 사회구조, 변동, 발전 등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하여 기존의 학문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현상에 관한 탐구에 따라 이후 인류학, 가족학, 신문방송학 등 새로운 학문 분야의 창설에 기초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사회학은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사회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메카니즘을 탐구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서구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사회학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든 것은, 이론화의 새로운 요구가 줄어든 한편,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사회학의 실용적 가치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루어진 인구의 전 세계적 이동에 따라 사회통합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사회학은 사회정책,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문제들과 융합되면서 다시금 그 분석력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 사회학은 일제시기에 도입되어 해방 후 사회 발전, 인구문제, 노사문제, 민주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 도전하며 크게 발전했으며, 역사학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일제시기, 현대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발전시켜 왔다. 사회학의 분석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된다. 사회발전연구는 그 대표적인 업적이었다. 일제시기로부터 사회학은 한국 사회의 구조와 발전에 대한 분석을 진전시켜왔으며 1960-70년대 급속한 사회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학은 활발한 연구를 수행했다. 인구문제는 또 다른 업적으로 평가된다. 1960-70년대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도하던 때에 과다인구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미국 등에서 지원을 받은 인구연구는 다각적인 가족정책으로 결실을 내어 효과적인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2000년대에 들어 거꾸로 사회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많은 연구를 산출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해체, 일탈, 청소년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도 사회학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사회학은 차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왔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빈곤과 사회갈등이 사회체제 자체를 흔들

만큼 심각한 사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사회학이 취업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성 하락의 요인이다. 경영학, 법학, 의학 등 실용성이 강한 학문들이 취업과 직결되면서 학생들을 잠식하는 가운데, 과거 사회학의 범주에 있었던 언론, 복지, 가족 등의 실용적인 부분이 독립된 학과에서 다루어지면서 사회학은 더욱 범주가 좁아든 이유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입시문제, 양극화, 세대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소통방식, 남북한 사회통합문제 등등 사회학적 분석과 대안을 기다리는 주제들이 우리 사회에 무수히 존재하며,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대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사회학의 중요한 역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저개발국의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분석, 국제협력, 인권증진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한국 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사회학의 발전과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학은 따라서 한편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 국제사회로 시야를 넓히면서 사회학의 분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학의 발전과제로서 다음의 몇 가지 주제에 주목할 수 있다.

1.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통합: 사회갈등은 사회학의 고유한 분석 영역으로 오랫동안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따라,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갈등의 양상이 계급 문제, 노동문제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매우 다분화되고 있다. 사회학은 이렇게 다분화되어 가는 갈등의 양상을 포착하고 미시적이고 동시에 포괄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도가 심각해진 계층격차가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벌어지고 있다.

둘째, 이념갈등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인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채로 민주화까지 맞게 되었다. 이제 이 과거의 사회변동 과정을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및 미래 방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소위 보수-진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 사회통합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대 문제는 오랜 사회문제이지만, 최근 일자리를 두고 청년-노인 세대가 격돌하고 있다. 경제학적인 미시연구가 일자리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은 보다 큰 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세대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2. 다문화: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대처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그것도 이들을 임시 고용 노동자로 보고 단기 단신이주를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정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쉽게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적 대처만이 있을 뿐, 아무런 사회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000년대 들어 보다 중요해진 문제는 결혼이주자들의 대거 입국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며 2세가 태어나면 한국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 이탈 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맞는 일이므로 사회 여러 부문에서 각기 이들의 정착을 돕는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총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편견 불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모색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해방 후 사회 발전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학이 다시금 세밀하면서도 포괄적인 분석의 기초를 놓아야 할 때다.

3. SNS를 통한 새로운 소통 양상: 사회 각 부분과 개인을 연결하는 소통방식은 사회의 형태를 결정하는 혈관과도 같다. 고전 사회학자인 뒤르켐은 사회관계가 기계적 연대(solidarity)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회 각 부분들의 기능의 분리와 연결의 차이에 기초한 개념화이지만, 그 부분들 간의 바로 이 소통의 양식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SNS는 소통양식의 일대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는 여러 면에서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가 변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SNS가 투표양태에 미친 영향, 젠더 함의적 변화 등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4. 투명성: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하여 후진국의 단계는 벗어났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투명성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어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환기시키고, 투명성 확보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사회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5. 인권: 21세기 화두인 인권에 대하여 법학에서 겨우 조금씩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인권을 시민운동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에서 시작되었으나 인권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이제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는 단계에 있다. 인권의 분석적 개념화 작업으로부터 국제비교, 국민인권의식조사, 인권과 정치적 민주화의 연관관계, 부패의 인권적 측면 등등 인권에 관한 연구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학적 연구에서 종합적 시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저개발국 협력문제: 한국사회는 원조 수급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조를 경제개발과 연관시키고 한국 자국의 이익을 원조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조에 인권지침을 주어, 원조된 자원들이 그 나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는지를 모니터하고 있다. 저개발국에 어떤 원조가 실질적 발전을 가져오는지, 혹시 주어진 원조가 인권침해를 딛고 경제발전에만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국제비교, 과학적 분석 등이 사회학에서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구재단의 지원방향

연구재단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지원방향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싶다. 실용적 정책연구와 함께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현재 연구업적의 양적 합산에 치우친 평가로부터 보다 다각화된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과학 기초연구의 필요성

점차 더욱 취업과 연관된 실용적 학문에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적 자원에 비해 필요한 기초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연구재단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총체적 구조와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각 부분의 실용적 연구에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기초연구가 튼실해야만 실용적 학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연구재단에서 사회과학의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해주길 바란다.

2. 평가기준의 다각화

지금까지 연구재단에서 시행한 여러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첫째 지나치게 계량적이며, 둘째 미국 기준이며, 셋째 자연과학을 준거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계량적이라는 것은 논문의 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을 말한다. 저서에 대한 평가도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둘째 미국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SSCI 게재논문에 대한 기계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연구재단의 이러한 기준은 각 대학의 신임교수 임용과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특히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학문의 식민화를 벗어나 사회과학의 토착화를 위해서라도 평가기준의 다각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미국기준의 기계적인 계량적 평가가 자연과학이나 일부 사회과학(예컨대 경제학과 경영학의 일부분)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대체적인 사회과학에는 맞지 않다고 보인다. 학문분야별로 평가기준을 적절히 다르게 세우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사회과학분야 국제화, 융합과학 관련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 SSK, WCU, BK21 등을 염두에 두고*

조경호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국민대 교수)

융합학문의 필요성

학과 간 구분, 학제 간 골이 너무 깊어 새로운 융합학문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 경제적으로는 범위의 경제가 다양하지 않은 우리의 경제구조에서는 융합학문 인력을 수용할 산업적 직업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임.
- 사회적으로 융합학문을 하나의 이질적 변이로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이 융합학문 정착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 SSK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융합학문이나 새로운 융합과학 전공에 대한 지원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 해외석학의 영입을 획일적인 비용과 조건보다는 초빙자의 역량에 따라 효율적인 영입 조건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하며 각 대학에서 석학을 초빙하여 심포지엄 형태로 매년 열며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연구에 대한 토론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해외석학을 장기간 형식적으로 체류시키기보다는 단기간에 여러 번 필요에 따라 방문하고 그 때마다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진정한 세계적 석학들이 진입장벽의 부담 없는 방문으로 한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초일류 해외석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해외석학을 초빙하여 지속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해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교수나 post-doc 이상의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장기 초빙이 어렵다면 유명 석학보다는 실질적인 신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박사급 인력의 유치에 예산을 투자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음. WCU 관련 사업단 참여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 *"이름값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초일류 해외 석학을 영입하는 것보다 앞으로 초일류 해외석학이 될 사람들을 영입했으면 좋겠다. 유명 연구소나 해외 유명 대학교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박사후 연구원의 신분의 사람들을 영입하자. 젊은 사람들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냈다면 (네이처1,2편 이상)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 *"초일류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에 필요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입지에 올라간 교수진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연구원일 것이다. 해외 유명 연구단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연구진들을 초빙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그리고 해외 석학을 뽑을 때도 개인의 판단보다는 논의와 토의를 통해 진행되어져야 할 것 이다."*
- 현재 SSK, WCU 사업비의 대부분은 소수의 해외석학 초빙이나 해외학술대회 참여에 투자되므로 이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수의 해외석학 초빙과 국내 학술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융합연구 및 연구 환경 조성 및 학생들에 대한 연구 지원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함.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 비율도 높아질 것이며, 또한 기본적인 융합연구의 인프라 육성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임.
- 초일류급 해외석학들은 기본적으로 WCU 사업단의 목적에 크게 동의하지 않으며 학생지도에도 소홀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해외석학을 무조건 초빙할 것이 아니라 사업단의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자하는 가능성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그 연구자들이 성과에 대한 압박 없이 장기간 연구하고 해외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Inbound 국제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WCU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사업단 소속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들의 outbound 국제화 강화 요구가 대단히 많았음. BK21 등이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

- 한국 WCU, BK21 학과 연구원들이 해외석학의 연구그룹에 3-6개월 주기적으로 파견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중요함.
-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석학의 인건비를 줄이고 해외석학의 연구실에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해외에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 SSCI 10%나 1%와 같이 외국에서는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표를 너무 크게 내세워서 필요한 곳에 논문을 내지 못하게 막는 일은 없어야 하며, 매년 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임.

- 너무 성과 위주, 논문 게재 위주의 평가로 인해 보다 오래 두고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연구 분야는 빨리 논문이 나오는 연구 분야들에 비해 평가가 낮게 측정되는 것이 SSK, WCU 사업 발전에 방해될 수 있음.

○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막대한 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해외석학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일부 무임승차 하는 해외학자에 대한 엄격한 성과관리가 요구됨.
  – 해외석학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연구비 사용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걸어놓고 성의 없는 일부 해외학자들이 지급액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에게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해외석학의 연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정한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외석학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카테고리별 연봉 상한선을 책정하며, 해외석학 기여도 및 실제 공동협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업적(해외석학과의 공저논문 등)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과학분야 모든 국제화, 융합과학 사업은 눈에 보이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무형의 성과가 더 중요함.

복지논쟁 시대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융합 과제

조흥식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서울대 교수)

복지논쟁 시대와 사회복지학의 위상

2009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무상급식 논쟁은 이제 급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큰 틀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범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의한 생활의 곤궁함과 사회양극화,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복지체제에 대한 논쟁은 점차 가열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을 어떠한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논의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순수' 혹은 '이론'의 성격보다는 '응용' 혹은 '실천'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한 단위국가나 국제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현상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기능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는 실무지식을 고취시키는 기능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학 연구와 교육을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47년 이화여대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사회복지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수는 무려 300여개나 된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와 교육체제는 아직도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 학문의 정체성 문제, 토착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계화가 덜 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대 학문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서 개개 학문의 벽이 너무 견고하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학, 미학 등 인문학도 관계되며, 환경생태학, 보건의학 등 자연과학도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복지국가 연구와 관련하여 다학제적 연구가 일천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타학문과의 학문적 융합은 이제 필수적 과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와 교육 현실 속에서 과연 사회복지학은 앞으로 지속될 치열한 복지논쟁과 복지국가 구축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 놓을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은 학문적 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각 학문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한 단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국가 정책적, 학문적, 이념적 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 연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학문 외재적 요인과 학문 내재적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학문의 위상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학문 외재적 요인으로 첫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수요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전담요원, 사회복지관담당 전문 직원, 각종 사회복지사업 전문 인력 등의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문제들은 복지수요를 증대시켰지만 아직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지켜야 할 전문영역의 범주가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복지학 위상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

둘째,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한 최소 졸업학점의 변화는 사회복지학 위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까지 160학점 졸업은 전공과목의 이수를 많이 하도록 했으나 1980년대 이후 130학점 졸업은 전공과목의 수를 축소시켰다. 더구나 교육부의 학부제 정책은 특히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학사과정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책임교과목 강의를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학의 연구풍토와 위상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학문 내재적 요인으로 첫째, 한국 사회과학 전반적인 학문풍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과학 전반이 대미종속적인 구조적 한계 내에서 뼈대를 형성하게 되어 실제로 학계의 인적 충원 역시 대미 편중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군부정권 하에서는 기존의 대외 종속적이고 체제유지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위한 논의가 주류 사회과학과는 달리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새로운 진보적 사회과학 패러다임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조류는 사회복지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개별적 사회화와 재사회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미국식 사회사업학 기술로만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하였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이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인접 사회과학이 보여준 진보적 연구동향과 학문적 성과에 비해서 제도개선 차원의 체제유지 성격을 답습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위상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외국 사회복지학의 조류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사업학을 수입, 모방한 한국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정책 분야가 강조되고 토착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토착화는 선·후진 각국의 사회복지학이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론 구축을 당연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융합 과제

문과 학문과 이과 학문을 아우르는 지식융합은 망원경과 현미경을 활용하여 보편적인 자연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학문을 사다리 모양으로 배열한데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작은 실체를 다루는 물리학을 사다리의 맨 아래 단에 두고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면서 화학과 생물학, 다음 단계에 심리학과 사회학이 나타나는 식으로 학문의 위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부터 분석 못지않게 종합(synthesis)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다양한 학문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다. 학문 간의 장벽이 엷어지면서 전문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보다는 여러 학문 간 공동연구가 요구되는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여러 상이한 학문 간 수평적 융합이 가속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융합은 이제 21세기 각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회복지학은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무상급식 논쟁이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전개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했던 학문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직 타학문과의 연계나 융합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볼 때,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상호 학문적 소통(academic communication) 요건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 학문적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요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첫째, 사회복지학이 다른 학문과 공통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은 미국 임상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실천 중심의 미시복지와 유럽 복지국가에서 논하는 거시복지로 대별하는 전공분야를 갖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학이 독립학문으로서 이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초광역 학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각각 보다 세련화하는 작업과 함께, 이 둘을 통합하는 개념틀의 개발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 지식과 이론을 하나의 학문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통된 사회복지의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 사회과학이론을 비롯하여 사회문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같은 사회복지실천 기초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복지대학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는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과내용으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예술, 철학 등의 기초교양 과목까지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성, 사회경제적 정의(justice), 위험집단(population-at-risks),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등을 연구하고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최근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어 사회복지학의 다른 학문과의 융합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둘째, 우리가 갖고 있는 학문의 공통적인 토착성 분야를 찾는 것이다.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경우에도 학문의 토착성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토착성 문제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s)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환경 이슈나 여성, 복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거나 국정전반에 걸친 감시활동을 하면서 거시 차원에서의 실천역할과 실천지식의 개발이 한국 사회복지학 위상 제고에 대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공통분야를 찾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로 관심이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서 고유의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의 확충이 필요해지고 있다. 대학입시 해결과 연관된 청소년복지, 학생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람을 위한 복지실천분야, 이주노동자, 난민을 위한 사회복지, 기러기 아빠를 비롯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군인복지 분야와 미국과의 FTA의 결과로 인한 농어촌복지 등 토착화된 이론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학문적 융합의 폭과 기회는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학문 융합에 대한 주도적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산하 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을 정부와 연구재단에 잘 전달하며, 옹호자나 대변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문의 융합에 대한 정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학문융합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간 공동연구 과제를 주어 산하 학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학문 융합에 대한 정교한 접근과 분석 방법의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고유한 학문체계를 접할 언어도구로서 전통적인 한문 문헌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아직도 학문과 사상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할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13년 학술세미나 토론문

황익주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서울대 교수)

크게 두 가지 내용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하나는, 필자가 부회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학회인 한국문화인류학회를 대변하여 한국의 사회과학 정책입안자들께 요청하고픈 사항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류학자인 필자가 전부터 생각해왔지만 특히 2010년부터 한국사회기반연구(SSK) 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활동하면서 더욱 민감히 생각하게 된 바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비 지원 사업들에서 논문 위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한국문화인류학회는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학자 및 학문후속세대가 망라되어 있는 단체이다. 인간 · 사회 · 문화 간의 관계를 주된 탐구 내용으로 삼는 기초학문인 인류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두

루 걸친 대단히 광범위한 하위분야들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인류학회(AAA)의 경우에는 약 40개에 달하는 분과학회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회원수도 1만 명을 상회한다. 선진국 사회들에서 인류학은 대단히 중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으로서 비단 학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 부문, 나아가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대학들에 인류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열려진 졸업 후 취업기회들도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나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에서 인류학의 위상은 대단히 주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창립된 지도 벌써 55년이 지났지만, 회원 총수가 200명 남짓한 수준이어서 사회과학협의회의 구성단체인 여타 모 학회들과는 달리 분과학회를 따로 거느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적은 회원 수를 가지고 연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회지를 연3회 발간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인류학 연구와 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려다 보니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대학에 설치된 인류학과들의 숫자도 총 11개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충청남북도, 제주도에는 단 한 개의 학과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인류학 전공자들의 취업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정은 열악하여, 국책 연구기관들이나 민간 연구소들 가운데 한국 인류학계가 배출하는 신진 연구 인력의 거점 활동공간을 이룬다고 일컬을만한 곳도 없이 대학의 교수직이 여전히 한국 인류학계의 신진 연구자들이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중의 취업 기회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과 취약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한국 인류학계가 그 간의 학술 및 교육 활동의 수준이나마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제공하는 인간-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의 심대함에 개인적으로 매료되어 한국 사회에서 인류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한국 인류학자들의 헌신 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본디 지니고 있는 주제 영역의 광범위함,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연구대상자들의 생활세계를 현장에서 참여관찰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연구방법론 상의 독특성 등은, 적은 연구인력과 취약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개인적 열정과 헌신만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인류학적 지식에 대한 복잡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일을 너무나 버겁게 만들고 있다.

현대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인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선진국 인류학계에서 주류를 이루는 바와 같은 외국 지역들에 대한 연구로서, 많은 한국 인류학자들이 자신이 박사논문 작성을 위해 현장연구를 수행했던 외국 지역을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 둘째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적 관심사들에 대한 인류학의 특징적 관점 및 현장연구 방법론에 의거한 연구이다. 셋째는, 한국의 지방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지방대학 인류학과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인류학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이다. 문제는 바로 이들 세 가지 방향의 작업들이 전혀 이질적인 연구현장들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연구대상자들과의 때로는 다년간에 걸쳐 지속되는 친밀관계(라포, rapport)에 기초한 심층적 인식을 추구하는 인류학의 방법론적 특성상 세 유형의 연구현장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가 지극히 힘들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류학의 선진국들에서는 개개 인류학자는 이들 세 가지 방향의 연구 작업들 중 자신의 취향이나 여건에 맞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학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인류학자들이 처한 현실적 여건은 어느 한 가지 방향의 연구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닌 주제영역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이르는 지극히 광범위한 학문적 영역들에 걸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장연구를 토대로 삼는 인류학의 방법론적 특성상 한 명의 연구자가 제대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연구현장의 유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은 모두 한국 인류학계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해 나가기에는, 도합 200명에도 못 미치는 전문 인류학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장래에라도 그러한 사회적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인류학의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국 대학에 도합 11개의 학과에 불과한 인류학 교육기관의 숫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에 한국문화인류학회를 대변하여 필자는 인류학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학문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흥을 위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정책 입안자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최소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당 한 개 꼴로만이라도 관내 대학에 인류학과가 개설되어 신진 인류학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다. 1988-89년에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목포대 등 4개 학교에 인류학과가 개설된 이후 전국 국공립대학에 인류학과는 단 한 개도 추가로 개설된 바 없으며, 앞서도 언급한대로 부산-울산-경상남도, 대전-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는 인류학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인류학 연구인력의 절대부족이라는 문제에 더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있어서도 공통의 교재개발의 어려움 등 각종 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만약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들에 인류학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국의 인류학과들에 배치된 전문 연구자들 및 대학원생들이 각기 자기네 지방 사회의 전통문화 및 현대적 이슈들에 대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의 결과를 국내의 다른 지역들뿐 아니라 외국 지역들과 비교연구 함으로써 인류학이 지닌 비교론적 관점의 장점까지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인류학의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단행본 연구서(monograph)보다는 논문 위주로 하려는 경향에 따른 맹점이다. 근래에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물들을 국제적 인용지수 시스템(SCI 혹은 SSCI)에 포함되거나 혹은 한국연구재단의 인정 학술지 시스템(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포함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급속히 전개되어 왔다. 한국연구재단이 관장하는 모든 연구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그런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서 국내 주요 대학들의 교수 채용 및 승진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런 류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가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아직껏 단행본 연구서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심사평가 제도가 정착된 논문들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능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현상이며, 그 간에 그러한 객관화 노력을 선도해 온 한국연구재단의 업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논문 위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른 맹점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논문 위주의 평가 방식이 이공 계통의 학문들의 경우에는 매우 적합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경제학이나 심리학 등의 분과학문에서는 주류로 정착되었을지언정, 인류학 같은 분과학문에서는 연구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인류학은 장기적 현장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인간 · 사회 · 문화 간의 총체적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까닭에 인류학에서는 인류학자로서의 연구능력에 대한 궁극적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짧은 논문이 아닌 단행본 연구서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학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단행본 연구서의 형태를 지닌 박사논문을 작성해야 하거니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인류학계에서는 대학의 인류학 교수가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박사논문 이 외의 단행본 연구서를 출판해야 한다. 제 아무리 SSCI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많은 사람이라도 단행본 연구서가 없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인류학과의 정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단행본 연구서란 단순한 논문 모음집이 아니라 다수의 장들로 이루어진 책 전체가 하나의 주제 하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저술이다. 따라서 젊은 인류학 연구자들은 장차 단행본 연구서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학술지 논문들 혹은 학술회의 발표문들을 하나씩 발표해나가며, 단행본 연구서를 출판하게 될 때 그것이 현재 한국에서처럼 '자기 표절'이라는 식으로 매도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인류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단행본 연구서 위주의 연구능력 평가 시스템이 정착된 선진국 인류학계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와는 반대로 논문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 가기만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인류학 전공자들로서는 한마디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하겠다. 더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여타 분과학문들에서도 인류학처럼 단행본 연구서들이 연구능력에 대한 궁극적 평가기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이에, 인류학을 포함한 이들 분야의 연구자들이 해당 학문의 정도(正道)를 걸으면서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수주라든가 교수 및 연구원 임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현행의 논문 위주의 연구결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 내지 수정보완해주시기를 한국연구재단의 관계자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정책 입안자들께 요청하는 바이다. 물론 한국의 학계 및 출판계의 현실 하에서 단행본 연구서에 의거한 연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점들이 내재해 있음을 필자도 잘 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논문들에 대해서조차 심사평가 제도를 적용하기가 난망했으나 오늘날에는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단행본 연구서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일이 인류학을 필두로 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분과학문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www.ewp.co.kr

한국동서발전㈜

빛을 나눌수록 세상은 더욱 밝아집니다

나눔은 실천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을 키우는 빛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기업
한국동서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밝혀 갑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는 빛을 만드는 한국동서발전

일산열병합

동해화력

당진화력

호남화력

울산화력

신재생에너지

대한지적공사
KOREA CADASTRAL SURVEY CORP.

날.아.라.LX

LX공사는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세계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비상하기 위해 힘차게 날개를 폈습니다.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라는 두 날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LX(CI) : 국토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리더,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의 전문가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뀝니다

- 국토정보 종합 조사 · 관리
- 공간정보산업 진흥 선도